

껍데기만 남은 ‘통합 특별법’…자치권·성장동력 다 놓치나

분야별 핵심 특례 삭제·수정… ‘지방 주도 발전’ 설계도 흔들
군공항 국가 지원·AI 클러스터 등 지역 숙원사업 줄줄이 제동

행안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뒷받침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특례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되면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개발·주택… 중앙정부 ‘통제권’ 여전=가장 먼저 제동이 걸린 분야는 도시계획 권한이다. 원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500만㎡까지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면제받으려 했으나,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전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통합 후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시 중앙정부의 승인과 보전부담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게 됐다.

주택시장 대응력도 약화됐다.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 대신 ‘지정 요청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주택도시시기금 재원 출처 근거도 사라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자질이 예상된다.

◇미래 산업… AI·에너지 ‘지방 주도’ 요원=광주와 전남이 각각 역점을 둔 AI와 에너지 산업 특례도 대폭 축소됐다. 광주시의 ‘AI 메가클러스터’ 및 ‘AI 집적단지’ 지정 조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기존 법령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의 핵심인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이 가로막혔다. 40MW 초과 발전사업 시 중앙부처 협의가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중앙 승인 절차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재원 지원과 공유수면 이용 허가 간소화 조항도 반영되지 않아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속도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농림수산·복지…지역 현실 외면한 ‘칼질 우려’=인구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대응한 특례들도 실종됐다. 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한 확대와 고령 은퇴농연금 도입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모델 구축이 어려워졌다. 농지 전용 결정권과 농업회의소 국비 지원 근거 역시 무산되어 농정 거버넌스 강화라는 목표가 무색해졌다.

전남도가 공을 들인 ‘첨단 농식품 수출단지’는 운영 기관 설립 근거만 남았을 뿐, 핵심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권과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가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인재 육성·군공항…숙원 사업 ‘법적 근거’ 후퇴=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권한이 교육부 반대 무산됐다.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완화 조항도 사라졌다. 지역 인재 육성의 컨트론타워가 될 인재양성지원단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단순한 기구 설립 수준에 머물게 됐다. 특히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전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항과 예타 면제 규정이 모두 삭제됐다.

중전부지 개발 시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수용되어, 특별법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이번 국회 제출안은 중앙부처의 권한 고수와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통합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특례들을 얼마나 복원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미래 실효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hb@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어”

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가 간 경쟁 치열한 상황
여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안전 대책에도 전력을 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중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월은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개호·정준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이개호 “남부권 시대 열겠다”
정준호 “500만 초광역 도시 건설”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자리를 둘러싼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오전과 오후 일정을 나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단체장 도전에 나섰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을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남부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45년간의 행정·정치 경험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업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는 에너지 자주권 확보,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해상풍력 중심 신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개호 의원

정준호 의원은 같은 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호남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혁신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500만 규모의 초광역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를 통



정준호 의원

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충족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로보틱스·피지컬 AI 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고산 오우가 정원

윤선도가 노래한 다섯 벗—달·구름·강·술·대—의 정신을 담아낸 정원, 자연과 벗하며 살아간 선비의 삶과 시심이 깃든 풍류 공간



고산윤선도박물관

1,775점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 사람들의 삶과 문화유물이 전시됨.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땅끝순례문학관

해남 문학의 숨결을 간직한 한옥 전시관으로 윤선도부터 현대문학까지 문학 가득한 순례의 길.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3



백련재 문학의집

고산 윤선도의 숨결을 품은 창작공간, 문인이 머물며 쓰고 쉬는 해남의 문학 산실.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9-29